

■ '유급 보좌관제' 도입 또다시 논란

“꼼수 예산편성 할 만큼 시급한가”

2006년에도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무산 윤봉근 의장 “의원들 의정활동 폭넓어 필요”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고용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편법으로 광주시에 수역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유급 보좌관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의회가 유급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수역원의 예산편성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수역원의 본 예산을 요구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꼼수'를 부린 셈이다.

◇'꼼수' 예산 편성=지방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보좌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법적인 근거를 피하기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인력 아웃소싱' 방법을 이용해 광주시에 수역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보좌관을 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정 서포터즈'라는 편법을 통해 예산을 편성, '혈세'인 시비로 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의정서포터즈'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의정지원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의원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광주시의회가 이처럼 편

법을 이용해 무리하게 내년도 본 예산에 수역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윤 의장은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유급 보좌관'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가장 적극적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현재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의정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유급보좌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윤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폭넓기 때문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의회 인턴보좌관 등 유급 보좌관에 대한 시민사회여론이 많이 좋아져 내년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인 '의정 서포터즈'를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점=광주시의회는 내년도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예산 편성 요구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을 둔다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근 국회의원 등 9명이 지난 5월6일

발의를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법'까지 동원해 수역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급 보좌관이 그렇게도 화급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두어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주민들의 혈세를 더 들여서라도 유급보좌관을 두어야 할 만큼 업무량이 폭증하든지 그 정도의 투자를 해도 좋을 만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재정이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회의 이번 '편법 유급보좌관' 예산 편성 요구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추진하면 당연히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을 둔다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근 국회의원 등 9명이 지난 5월6일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광주 북구 흥동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지향 공천제도 공청회'를 열었다. 나경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북 적십자간 독립적 통신망 추진”

유종하 총재 “당국간 대화와 분리해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총재는 “독립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북측 적십자와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재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국간 대화는 당국이 하는 것이고, 적십자의 역할은 분리해야 한다. 한적이 통일부의 부속기관도 아니다. (일을) 대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북측 적십자와) 독립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총재의 이 발언은 남북관계의 경색 여부에 연동해는 적십자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인도주의 사업영역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남북 적십자 간의 판문점 연락채널도 정부의 '5.24 조치'로 끊긴 상태다.

3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맞춰 방북하는 유 총재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에게 ‘정치적 분위기에 상관하지 말고 인도적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좋은 나쁜 적십자의 영역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면 한적 총재로서 북한의 실정을 정부에 설명하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규장각 도서 돌려받나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약탈·G20 계기 기대 대여기간 갱신방식으로 협상타결 가능성도

프랑스가 병인양요(1866년)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가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근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도 낙관적인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적인 관측이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에) 직접 오시니까 지금 단계적인 목표로서는 G20 정상회의 때 받을 수 있도록 협의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가 이번 기회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실무협상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측에 실질적인 반환 효과가 있는 '영구 대여' 방식으로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든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프랑스가 한국에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하는 대신 한국 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일정기간 전시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프랑스가 그동안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대신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문화재를 받아내는 '상호 대여'를 고집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태도 변화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상호교류와 대역'의 원칙에 합의한 뒤 17년을 끌어온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과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과 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내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만약 양국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타결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측이 요구한 '영구대역'이 아니라 대여기간을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될 공산이 크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법상 '영구대역'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단기간에 프랑스 국내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대여기간을 갱신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대여기간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3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 가산점 적용하면 女공무원 합격 급감”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여성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가산점 적용시 남성 합격자는 현재 213명(58.7%)에서 260명(71.6%)로 47명(12.9%P) 증가하는 반면 여성 합격자는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제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전과자·성폭력범죄자 금지안 마련

앞으로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범죄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중개업체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김, 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 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지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품질경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봉선동 The S1 더셀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원영!!

봉선동 더셀 아파트 100% 분양률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에서 이전까지)

주소	동구계림동	남구방림동
대지면적/건적면적	294/88.94	383.1/115.89
대지면적/건적면적	651/193	650/197
매매금액	6억1천만원 (용자 1억 4천만원포함)	7억9천만원 (용자 1억 5천만원포함)
건물내역	원룸14개·투룸2개 4층 주민주세(최고급재), 풀옵션 "수익성최고!"	1층, 상가점포 3칸 원룸 18개, 4층주민주세(아파트 50평형, 옥실 웰빙 최고급 자재)풀옵션 "수익성최고!"

* 원룸: 보 200만원/월 30만원
* 투룸: 보 300만원/월 43만원(원.투룸관리비포함)
* 풀옵션, 즉시입주가, 위치좋은, 교통편리, 매매·임대
* 차세대 상가 165㎡(50평) 현재 성업중, 매 5억6천만원

장흥부동산 중개컨설팅

TEL 062-369-0347

010-8625-3328 / 010-5050-8145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건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 좋고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 가능 1억 주인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접 5000평 완전평지 현행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 등 최적 개발업자 환영 1억 주인적

문의 011-837-3140